

#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 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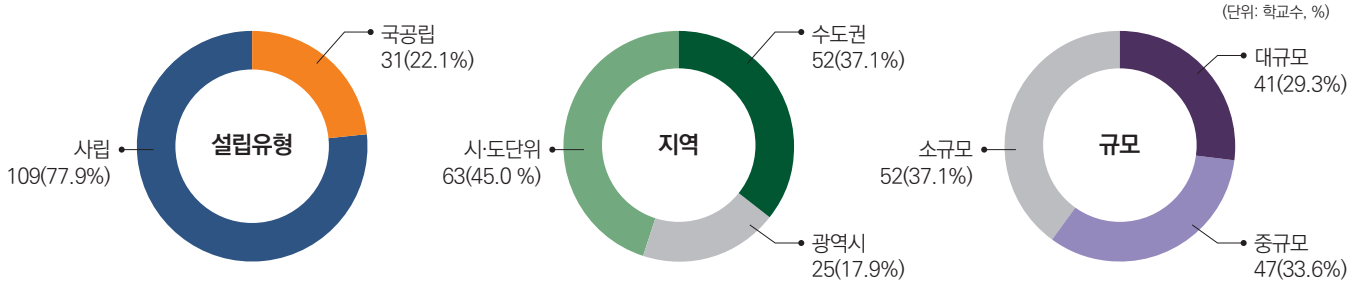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생성형 AI·교원·대학 국제화

2026 KCUE survey of University Presidents( I )

Key Tasks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Generative AI, Faculty, and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 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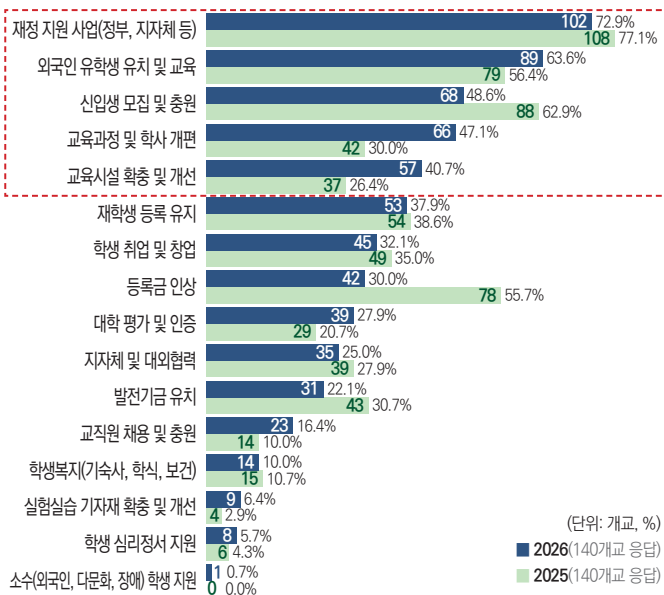
-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의 교육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하고 정책 건의 등에 활용
- **조사기간**: 2026년 1월 7일(수) ~ 2월 6일(금)
- **조사방법**: 전자공문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한 웹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율**: 회원대학 중 192개교\* → 140개교 응답(72.9%) \* 문항특성상 특별대 5교 제외(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림 1] 응답대학 특성

### II. 현시점에서 회원대학 총장들의 관심 영역 우선순위(5순위-복수응답) 비교

- (전체)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2.9%(102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63.6%(89개교), '신입생 모집 및 충원' 48.6%(68개교),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7.1%(66개교),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40.7%(57개교) 순으로 나타남.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은 1위로 변동 없으나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4.2%p)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은 전년 대비 7.2%p 상승하여 2위를 유지함.
  -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47.1%)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40.7%)은 전년 대비 각각 17.1%p, 14.3%p 대폭 상승하여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은 새롭게 5위권 내로 진입하였고, '등록금 인상'(30.0%)은 전년 대비 25.7%p로 대폭 감소함.



[그림 2]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2025년( I ) 대비)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관심 영역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은 사립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시도단위 대학과 소규모 대학에서 각각 1순위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2순위,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3순위이며, 수도권 대학에서는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
  - '학생 취업 및 창업'은 대규모 대학에서 3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및 수도권 대학에서도 5순위 안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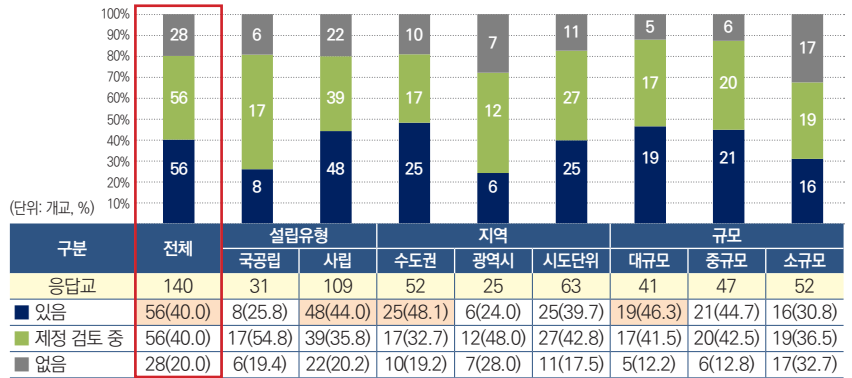
<표 1> 현시점에서 총장들의 관심 영역 순위(상위 5개)

항목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소규모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	1	1	2	1	1	2	1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2	3	1	3	2	3	2	2
신입생 모집 및 충원	3		3		3	1		3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	4	2	4	4	4	5	5	3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5	3		2	5		4	
재학생 등록 유지			5		5	4		5
학생 취업 및 창업		5		5			3	

### III.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관련

○ 생성형 AI 활용 정책(가이드라인·규정·지침 등)의 채택·적용 여부는, '있음'과 '제정 검토 중'이 각각 40.0%(56개교)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은 20.0%(28개교)로 나타남.

- 「2024 대학총장설문 II (2024.06.19., 131개교 응답)」의 생성형 AI 정책 채택·적용 현황(30개교)과 비교할 때, 본 조사에서는 56개교로 나타나 제도화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그림 3】 AI 활용에 대한 학교 정책 채택/적용 여부

○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도입(“있음” 응답)한 대학을 살펴보면,

- 설립유형별로는 사립 대학(44.0%, 109개교 중 48개교)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48.1%, 52개교 중 25개교)이,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46.3%, 41개교 중 19개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채택·적용한 56개교의 정책 영역별 세부 사항은,

- [보안·데이터관리·지식재산] 영역의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명시한 대학이 4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연구윤리·데이터 관리' 41개교, '저작권·지식재산 지침'과 [교육·수업] 영역의 '표절 부정행위 지침'은 각각 37개교 순으로 나타남.

-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세부 사항은 [거버넌스·지원체계] 영역의 '위반 조치 및 지원체계'가 23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교육·수업] 영역의 '사용 고지 기준'과 '교수 학습·평가 가이드'가 각각 22개교로 그 뒤를 이음.

〈표 2〉 생성형 AI 활용 정책(가이드라인·규정·지침 등)에 반영된 내용(N= 56개교)

정책영역	세부 사항	명시(부분·조건부 포함)	제·개정 검토 중
보안·데이터관리·지식재산	정보 보호 및 보안: 민감정보·내부자료 입력 금지, 보안 등급 등	45	9
	연구윤리·데이터 관리: 연구데이터 보안, IRB, 책임 규정 등	41	10
교육·수업	저작권·지식재산 지침: 산출물의 권리 귀속, 라이선스 준수 및 교육자료 활용 기준	37	14
	사용 고지 기준: 과제 보고서 등 AI 사용 여부/범위 표기	32	22
	표절 부정행위 지침: 표절 부정행위 판별, 산출물 출처 표기 의무화 등	37	18
	AI 윤리·책임 사용 교육: 학생/교원 대상 윤리적 사용 및 책임 교육 의무화(교양 필수 등)	28	21
거버넌스·지원체계	교수 학습·평가 가이드: 대체 평가(구술/실습 등) 운영 지침 등	30	22
	위반 조치 및 지원체계: 단계별 징계/지도 절차, 상담 창구(FAQ) 운영	23	23
	전담 조직·지원 인프라: AI 센터/TF, 학내 지원 서비스(각종 AI 툴 지원, 전용 포털 구축 등)	30	18

○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는 가중치 반영 결과, '평가 기준 명확화'와 '과정 중심 평가'가 공동 1순위(199점)로 나타남. 이어 '대면 평가 확대(148점)'가 3순위로 나타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는,

- '평가 기준 명확화'가 사립/수도권·시도단위/중규모 대학에서 1순위로, '과정 중심 평가'가 국공립/광역시/대규모·소규모 대학에서 1순위로 각각 나타남.

- '교수자에 대한 지원/연수'는 수도권/중규모 대학에서 3순위로 나타남.

〈표 3〉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평가 기준 명확화: AI 허용/금지 예시 안내 및 구체적인 평가 기준 제공	199	1	2	1	1	2	1	2	1	2
과정 중심 평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현장 실습 등 수행 과정 평가 확대	199	1	1	2	2	1	2	1	2	1
대면 평가 확대: 구술, 발표, 토론 등 실시간 상호작용 평가 강화	148	3	3	3		3	3	3		3
교수자에 대한 지원/연수: 평가 설계 역량 강화 교육	131				3				3	
작성 과정 기반 검증 강화: 단계별 산출물 제출, 학습 로그 제출, 구술 문답 등	113									
시험 운영 보안 강화: 감독 시스템 개선 등	44									

\*주: 본 자료에서 누락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 IV. 교원 경쟁력 강화 관련

●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이 1순위(239점)로 나타남. 이어 '성과 보상 재원 확충' 2순위(161점),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3순위(156점)로 나타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 소규모 대학은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남.  
 - '연구 인프라 및 지원 인력 확대'는 국공립 대학에서 1순위, 수도권 대학은 2순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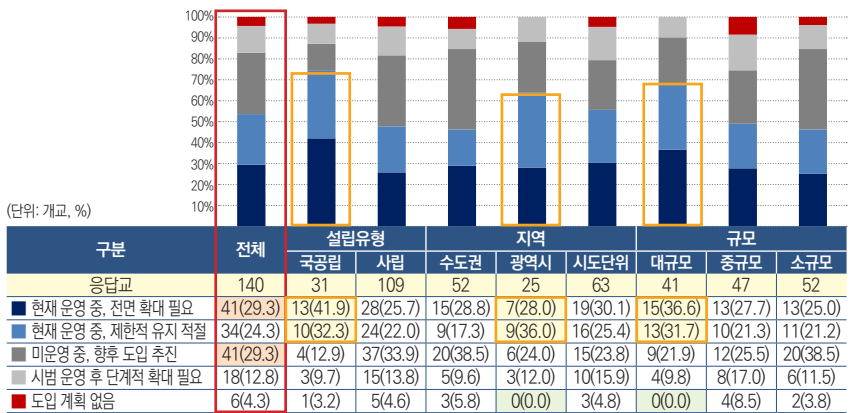
● 차등보상제 또는 교원 성과급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은, '현재 운영 중, 전면 확대 필요'와 '미운영 중, 향후 도입 추진'이 각각 29.3%(41개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재 운영 중, 제한적 유지 적절' 24.3%(34개교) 순으로 나타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현황을 살펴보면,  
 -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74.2%, 31개교 중 23개교)이, 지역별로는 광역시 대학(64.0%, 25개교 중 16개교)이,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68.3%, 41개교 중 28개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광역시와 대규모 대학 모두가 운영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으로 응답함('도입 계획 없음' 0건).

〈표 4〉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영역(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	239	1	2	1	1	1	1	1	1	2
성과 보상 재원 확충	161	2	3	2	3		3	2	2	3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156	3		3		2	2		3	1
연구 인프라 및 지원 인력 확대	129		1		2	3		3		3
교원평가·승진·재임용 제도 개선	106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40									

\*주: 본 자료에서 누적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그림 4〉 차등보상제 또는 교원 성과급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표 5〉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재원 부족: 성과급 처우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	252	1	1	1	1
구성원 합의 곤란: 평가기준 차등 폭에 대한 이견/갈등	177	2	2	2	3
평가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어려움: 지표 신뢰도 등	155	3	3	3	2
학문 분야 특성 반영의 어려움: 가중치 설정 갈등	102				
교원단체 교수회/노사 등과의 조정 부담	74				
데이터 시스템 미비: 성과 업적 관리 시스템 부족	31				
법률 규정 등 규제에 인한 자율성 제약	25				
법인/이사회 의사결정 지연	11				

\*주: 본 자료에서 누적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가중치 반영 결과, '재원 부족: 성과급·처우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가 1순위(252점)로 나타남. 이어 '구성원 합의 곤란' 2순위(177점), '평가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어려움' 3순위(155점)로 나타남.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어려움은, 소규모 대학을 제외한 모든 유형(설립·지역·규모)에서 1~3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남.  
 - 소규모 대학은 '평가의 공정성·수용성 확보 어려움'이 2순위로 나타남.

## V. 대학 국제화 관련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대교협이 대학에 우선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가중치 반영결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1순위(214점)로 나타남.  
 - 이어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2순위(149점),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3순위(137점)로 나타남.

〈표 6〉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대교협이 대학에 우선 지원 사항(우선순위 3순위)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214	1	2	1	1	2	1	1	1	1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149	2	1	3		1	3	2	2	3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137	3		2	2		2		3	2
대학 및 유학생 재정지원 확대	94		3			3				
외국인유학생 관리 시스템 고도화	84					3		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79									
유학생 유치 지원	78									

\*주: 본 자료에서 누적가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참고 「2024 대학총장설문 I (2024.01.31.)」 서술형 답변은 1, 2순위는 동일, 3순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으로 나타났음.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우선 지원 요청 사항은(표 6 참조),
  - 국공립 대학과 광역시 대학은 전체적인 순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이 1순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2순위, '대학 및 유학생 재정지원 확대'가 3순위로 나타남.
  - 사립/수도권·시도단위/소규모 대학에서는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이 2순위로 나타남.

-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 또는 고려하고자 하는 국제화 분야는 가중치 반영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장기: 학위과정 등)'가 1순위(344점)로 나타남. 이어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트위닝 프로그램 운영' 2순위(149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단기: 여학연수 등)' 3순위(128점)로 나타남.

〈표 7〉 향후 중점 추진 국제화 분야(우선순위 3순위)

- 대학의 설립유형, 지역, 규모에 따른 향후 중점 추진 국제화 분야는,

- 소규모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단기: 여학연수 등)'가 2순위로 나타남.
- '해외 대학과의 단기 교류 활성화'는 국공립 대학에서 2순위, 수도권·광역시/대·중·소규모 대학에서 3순위로 나타남.

항목	가중치 반영합계 그래프	우선순위									
		전체	설립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	사립	수도권	광역시	시도단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장기: 학위과정 등)	344	1	1	1	1	1	1	1	1	1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트위닝 프로그램 운영	149	2	3	2	2	2	2	2	2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단기: 여학연수 등)	128	3		3		3	3	3		2	
해외 대학과의 단기 교류 활성화	123		2		3	3		3	3	3	
국외분교 및 국외캠퍼스 설립 운영	30										
프랜차이즈(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24										
국외시설(교육원, 연구소 등) 설치	18										
합작학교 설치	3										

\*주: 본 자료에서 누적이중치는 1순위를 3점, 2순위를 2점, 3순위를 1점의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한 값을 의미함

-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해외 진출 및 국외 캠퍼스 설립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제약 요인과 정부 지원 과제에 대한 의견은 140개 대학 중 95개교가 답하였으며, 아래 4가지 핵심 제약 요인으로 범주화 됨. \* 1개교 응답이 여러 범주에 중복 포함될 수 있음

- '법·제도적 규제(설립 제한, 비자 규제, 예산 집행 제약 등)'가 1위(48개교), '재정 부족(운영비·인건비 부족)'이 2위(46개교), '인프라 및 정보 부족(정보 비대칭, 외교 지원 부족, 전문인력 부족)'이 3위(27개교), '국가 간 학사 제도 및 학위 요건 불일치(학기제 차이 등)'가 4위(15개교)로 조사 됨.
- 설립유형별로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 상의 설립 불가 원칙과 공무원 정원(TO) 및 예산 집행 지침의 경직성으로 인한 '설립 및 운영의 법적·행정적 권한 부재'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함. 반면, 사립 대학은 '비영리법인 해외 직접투자 불가' 규제와 같은 자산 운용의 제약, 그리고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파견 인력의 체재비(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한계 및 투자 규제'를 핵심 제약 요인으로 호소함.

Remark

‘양적 확장’에 기반한 ‘질적 내실화’로의 연계·심화: 디지털·글로벌 도약 위한 재정·규제 혁신 시급

1.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은 '재정 지원 사업'이 1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이 2위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 특히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은 새롭게 상위 5위권에 진입했으며, 이는 교육 내실화와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보임. 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감소함.
2.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 도입 여부는 '있음'과 '제정 검토 중'이 각각 40.0%(56개교)로 나타나 「2024 대학총장설문 II (2024.06.19., 131개교 응답)」 30개교 대비 제도화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로 볼 수 있으며, 도입은 사립/수도권/대규모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다만 AI 활용 정책을 도입한 대학(56개교)의 세부 항목은 [보안·데이터관리·지식재산] 영역의 명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교육·수업] 및 [거버넌스·지원체계] 영역은 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제·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생성형 AI 환경에서의 학생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 명확화'와 '과정 중심 평가'가 공동 1순위로 제시된 점은 AI 확산(활용 방식 다각화) 국면에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3. [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투자 영역은 '우수 교원 유치 조건 개선'이 제시되었으며, 동시에 성과 보상 재원 확충과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 수요도 뒤를 이어 나타남. 또한 차등보상제(성과급)는 '운영 중, 확대 필요'와 '미운영 중, 도입 추진'이 모두 높게 나타나 성과 보상 체계의 강화·정비 요구가 확인되나, 제도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은 '재원 부족: 성과급·처우 개선에 투입할 가용 재원 한계'가 모든 유형(설립·지역·유형)에서 1순위로 지적됨.
4. [국제화 관련],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지원 요구로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유학생 관리 책임 분담' 순으로 나타남. 또한, 대학들은 향후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1순위)'와 '공동·복수학위제, 트위닝 프로그램(2순위)' 등 고도화된 국제화를 지향하나, 막대한 초기 비용과 경직된 법·제도를 현실적 장벽으로 인식함. 이러한 여건에서 K-Edu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대학 현장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법·제도적 규제(설립 제한·예산 집행 경직성·비자 등)'와 '재정 부족(초기 투자비·인건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규제 혁신이 시급함.